

민주,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지인 동행 논란에 '국기문란'

“국가 기강문제... 국정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동행 문제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기강이 달린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겠다고 했고 국기문란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원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의 신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예산이 지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무보수 자원봉사였고 숙소와 항공편만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은 다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나라의 영부인이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동행하고 국무를 봤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런 게 가능하다면 해외 가서 무보수로 일하고 항

공료와 호텔비를 내달라고 요청할 국민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민약 문제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께서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갔다면 은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온갖 크비 일들이 다뤄지는 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 조회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지인이라

‘민간인 신분’ 인사 비서관 배우자 해외 순방 동행 대통령실 예산 지원했다는 점에서 논란 불거져

고 데리고 갔다? 차라리 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며 “저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었나”라며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나?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

로 지인을 쓰고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으로 정식 문제제기하겠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오늘 한번 의논해 보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국기문란 논란에 '국기문란' 강 의원은 “국가의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민간인이 동행했다”며 “단순 동행이 아닌, 사전접사를 다녀오고 선발대로 출발했다”고 한다. 대통령 부부가 목는 속소 동선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일부터 선발대로서 현지 최종 점검까지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동선은 비밀정보다. 비밀을 취급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접근 가능하다.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계한 허용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더군다나 외교일정이다. 대통령 부부가 언제 어디서 외국정상을 만나는지를 인사비서관 부인이라는 민간인이 사전에 알고 있다는 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선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게 불과 5년 전이다. 또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패배에 대한 평가, 통합의 시작”

‘당대표 도전’ 민주 김민석 의원, 전주 찾아 지지 호소
전북 사안 관련 “당연한 지지 바랄 수 없어... 혁신해야”
전주를 공천에 “당대표 될 시 무공천” 언급에 파장 예고

“민주당의 힘은 당이 하나 될 때 나타난다. 그 통합의 시작은 패배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동포은)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석 의원은 “모든 정치인은 평가 받고 반성할 때 진정한 빛을 보며, 그렇기 때문에 평가와 반성은 정치인의 절대 의무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출마는 자유다 하지만 평가는 절대 의무이며, 지방선거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에 선거방식이나 정책의 평가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평가와 책임을 지어준다”고 말하며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 등의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와 당의 큰 위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아 코로나 이후 바로 다가오는 스테그플레이션과 같은 국가위기에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자신은 민주당을 사랑하고 근본에서 재건할 사명감을 가졌다”며 자신의 출마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은 18년 동안 광야에서 시대 정치를 흡수했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자신의 경험과 위기 대처 능력이 다른 후보보다 훨씬 앞선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또한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고 민주당을 하나로 만들어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의 사안에 대해 “자신은 정치 신인때부터 새민공에 관심이 매우 많았으며, 새로운 리더십을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고, 이제는 전북에서 당연한 지지를 바랄 수 없다며 혁신적인 정책만이도 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주에서 이상석 의원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제는 당이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을 이라고 말해 파장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기자

“정권 나팔수 돼야
한다면 남을 이유 없다”

홍장표 KDI 원장, 한덕수 총리 발언 비판하며 자진 사퇴 의사



문제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생각이 다른 의견에 귀를 닫았다면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장표 원장은 6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배포한 ‘총리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연구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제가 떠나더라도 KDI 연구진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사실상 사퇴 입장을 나타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홍 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가했다.

문제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 원장은 이전 정부의 초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5월 KDI 원장으로 임명됐다. KDI 원장 임기는 3년이다. /뉴스스



의사봉 두드리는 우상호 민주 비대위원장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정애, 박홍근

민주, 당대표 컷오프 여론조사 30% 반영

전당대회준비위 案대로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규칙안을 놓고 내용을 쥐고 있는 가운데 6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봉합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전대 규칙안 최대 쟁점인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 구성과 최고위원 선거에 도입된 권역별 투표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 전준위 의결안을 전대 규칙으로 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2~3일 사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떠올랐다. 그래서 오늘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이전 전대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어떻게 뽑는다는 문제가 주요 쟁점인데,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국민여론조사 비율은 전준위에서 올라온 대로 의결했다”고 운을 폈다.

이어 “최고위원을 뽑는데 있어서 지역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권역별 투표제도는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가 스스로 철회했다. 중장기 과제로 좁혀 이것에

대한 설계를 고민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 도입하는 건 아닌 결로 당무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 컷오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시간 동안의 토론이 진행됐다고 우 비대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의 투표만으로 컷오프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은 민중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 것에 대해 우 비대위원장은 “전준위는 당 대표·최고위원 컷오프 기준을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로 하자고 했고 비대위는 모두 중앙위원 100%로 해야 한다고 했었다. 초반에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가 당 대표 컷오프엔 전준위안을 적용하고 최고위원 선거엔 비대위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던 비대위가 스스로 그 안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묻자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확대 가능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

기를 충분히 했다. 다만 제도 설계와 관련해 일리 있는 문제 의식이 있어서 이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비례대표 출마 시 어느 권역으로 가아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된 것이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지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당원들이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서 당무위에서 격론 벌어질 만한 사안을 줄여보자는 정치적 판단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준위장 사퇴 의사를 밝힌 인규백 의원의 사퇴를 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 비대위원장은 “수리하지 않겠다”고 정치하는 집단에게 안 의원의 서운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서로 서운하거나 아니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다시 성의있게 전준위원장 역할 맡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은 진행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채 책임이라 생각하고 당원, 의원, 전준위 다 마음 풀고 수정 결의된 안을 갖고 성공적으로 전대를 치를 수 있게 힘을 합하자”고 밝혔다. /뉴스스

첫 고위당정, 물가 안정 다짐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신속집행·추석 민생대책 마련
규제개혁·기업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최우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정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물가 안정을 다짐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신속 집행,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매일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허은 국민의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물가 등 민생안정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가 발표 대책 집행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득중립적 지원금 및 에너지 비우려, 법안택시·버스기 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 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관·기금연결, 할당관계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대책도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입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허 대변인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

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장기 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며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은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체날을 상시로 운영하면서 장애요인 등을 적시에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며 “당에서 추진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첫 고위당정 협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가지며 분위기는 좋았다”며 “비공개로 전환되고 서로 많은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당에서 요청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까지 모두 말씀했고 그에 맞춰 총리와 수석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현안 자료를 저희가 보고 받으면서 그에 따른 현안에 대한 말씀도 나눴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의 정례화 여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매일 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당이나 정부에서든 요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멤버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여부 관련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뉴스스